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일, 김형동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4.11.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5.2.18.)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가결)

제1차 전체회의(2025.2.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  
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김형동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함.

특히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자연환경학습원의 설치 및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관할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적 현지성이 강한 환경사무와 관련된 국가 권한을 시·도 및 시·군·구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종전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 관할 구역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권한 및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경우에도 부여하도록 특례를 두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환경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sup>1)</sup>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환경사무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대도시의 장 등에게 새롭게 권한이 부여될 경우 지방자치분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 주민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무를 수행함에 따라 행정의 주민만족도 및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방이양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사무가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이 약해져 사무가 충실히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환경사무의 경우에는 환경오염의 영향이 광범위하고 그 대응을 위해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권한 행사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함께

#### 1)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 개정대상 법률명                       | 개정사항                                                           |
|--------------------------------|----------------------------------------------------------------|
| 폐기물관리법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군·구청장에게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변경, 취소, 인수 허가 등 권한 이양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및 지역개발계획 반영 요청 권한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                  |
| 물환경보전법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과 골프장에 대한 농약 및 잔류 여부 확인 사무 이양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역교육계획 수립 권한을 대도시의 장으로 확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취소 및 정문 실시 권한 조정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후관리, 청문,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 등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               |
| 지하수법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승인 권한 이양                           |
| 도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환경부장관 외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권한 부여              |
|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사무 주체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                                   |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수정가결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수정가결

####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 수정이유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환경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개정을 위한 내용이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관리 권한과 시·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권한,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권한 등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권한 행사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임.

### 수정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등 3개 법률은 현행대로 유지함에 따라 제명을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 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함.
- 나. 「폐기물관리법」 상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관리 권한은 동 사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감독 필요성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등록제도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1조 삭제).
-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 시·군·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권한은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전체적인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측면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경우 정부 차원의 조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권한 이양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안 제2조 삭제).
- 라. 「물환경보전법」 상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관리 권한과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 권한은 수질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경우 개별 지자체 차원의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삭제).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중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로 한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1조부터 제5조까지로 한다.

안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 원           안                                                                                                                                                                                                                                                                                                                                                                                                                                                                                      | 수       정   안                                                                                                       |
|----------------------------------------------------------------------------------------------------------------------------------------------------------------------------------------------------------------------------------------------------------------------------------------------------------------------------------------------------------------------------------------------------------------------------------------------------------------------------------------------------|---------------------------------------------------------------------------------------------------------------------|
| <p>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br/>일괄이양을 위한 <u>폐기물관리법</u><br/>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br/>법률</p> <p>제1조(「폐기물관리법」의 개정)<br/><u>폐기물관리법</u> 일부를 다음과<br/>같이 개정한다.</p> <p>제2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br/>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특별<br/>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br/>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p> <p>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br/>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br/>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br/>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br/>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br/>로 한다.</p> <p>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br/>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br/>단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br/>도지사”를 각각 “환경부장관,<br/>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br/>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p> | <p>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br/>일괄이양을 위한 <u>환경교육의 활<br/>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br/>개 법률</u>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p> <p>&lt;삭 제&gt;</p> |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각각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45조제5항 중 “시·도지사 또는”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는”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나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 <삭 제>

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폐기물처리시  
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2항 전단 중 “환경  
부장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경우: 환경부장  
관

2.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지사

제11조의3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로,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한 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중 한 개 이상의 신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공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중 한 개 이상의 신문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3제3항”을 “제11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환경부

장관”을 “환경부장관이나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한  
다.

제19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이  
나”를 “환경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나”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  
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  
관서”를 “지방환경관서”로 한  
다.

제3조(「물환경보전법」의 개정) <삭 제>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  
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7항 및 제8  
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골프장에서의 맹·고독성 농약  
의 사용 및 잔류 여부를 매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고,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시·도 환경교  
육계획의 수립)”을 “(지역 환경  
교육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을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  
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  
시”라 한다)의 장은”으로, “특  
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  
·도계획”이라 한다)”을 “특별

제1조(「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원안 제4조와 같음)

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  
다)와 대도시의 지역환경교육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  
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 시·도계획”  
을 “시·도지사와 대도시의 장  
은 지역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국가계획 및  
시·도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  
조 요청 등)”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으  
로, “시·도계획”을 “지역계획”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계획”을 “지역계획”으  
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나 대도시의 장”으로 하고, 같  
은 조 제4항 중 “시·도계획”  
을 “지역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도계획”을  
“지역계획”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시·도 계획”을 “시·도의 지역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으로, “다음 각 호의”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 환경교육센터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처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6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제26조 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회 환경교육기관의 지정취소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제5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후단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시·도지사

제2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개정) (원안 제5조와 같음)

는”을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따라 시·도  
지사가”를 “따라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로 한다.

제6조(「지하수법」의 개정) 지하  
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시·도지사  
와 협의한 후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를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도지사에게”를 “환경부장관과 관계 행  
정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7조(「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  
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  
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제3조(「지하수법」의 개정) (원  
안 제6조와 같음)

제4조(「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  
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원안 제7조와 같음)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으로, “시·도지사 소속하에”를 “시·도지사와 대도시의 장 소속으로”로 한다.

**부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1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사항

제5조(「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

(원안 제8조와 같음)

**부칙**

<삭 제>

|                                                           |  |
|-----------------------------------------------------------|--|
| <p><u>에 한정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을 “제62조제1항”으로 한다.</u></p> |  |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  
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  
한 법률안

제1조(「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환경교육  
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을“(지역 환경교육계  
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  
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  
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  
·도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  
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대도시의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  
역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 시  
·도계획”을 “시·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지역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국가계획 및 시·도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으로, “시·도계획”을 “지역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계획”을 “지역계획”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계획”을 “지역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도계획”을 “지역계획”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시·도계획”을 “시·도의 지역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를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로 한다.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으로, “다음 각 호의”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처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6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취소

###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제2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후단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따라 시·도지사가”를 “따라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로 한다.

제3조(「지하수법」의 개정)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를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도지사에게”를 “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4조(「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으로, “시·도지사 소속하에”를 “시·도지사와 대도시의 장 소속으로”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6조(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대도시의 지역 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 |
| ②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지역계획-----<br>-----.                                                                                                                                                                                               |
| 제7조(국가계획 및 시·도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계획 또는 시·도계획을 관                                                                                                                        | 제7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 지역계획-----                                                                                                                                                           |

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시·도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계획 및 시·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시·도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

② -----  
-----  
-- 지역계획-----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지  
역계획-----  
-----.

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 -----  
-----  
지역계획-----  
-----  
-----  
-----  
-----  
-----  
-----  
-----  
-----.

② (생 략)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4. (생 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sup>1</sup>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26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시·도  
의 지역계획 -----  
-----

3. 4. (현행과 같음)

② -----  
----- 말한다. 이하 같다-----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  
-----  
-----.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국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

제31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  
-----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  
-----.

1. (현행과 같음)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

|                                                                                                                                                                                                                                                                                                                                    |                                                                                                                                                                                                                                                                                                                                                                                                                  |
|------------------------------------------------------------------------------------------------------------------------------------------------------------------------------------------------------------------------------------------------------------------------------------------------------------------------------------|------------------------------------------------------------------------------------------------------------------------------------------------------------------------------------------------------------------------------------------------------------------------------------------------------------------------------------------------------------------------------------------------------------------|
| <p><u>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br/>교육센터</u></p> <p>3. ~ 5. (생 략)</p> <p>제32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해<br/>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br/><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u>을<br/>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br/>야 한다.</p> <p>1. <u>제15조제3항에 따른 사회환<br/>경교육기관의 지정취소</u></p> <p>2. ~ 4. (생 략)</p> <p>5. <u>제26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br/>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br/>의 지정취소</u></p> <p><u>&lt;신 설&gt;</u></p> | <p><u>경교육센터</u></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32조(청문) ① -----<br/>-----<br/><u>처분</u>-----<br/>-----<br/>-----.</p> <p><u>&lt;삭 제&gt;</u></p> <p>2. ~ 4 (현행과 같음)</p> <p>5. <u>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br/>경교육센터</u>-----<br/>-----</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br/>·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br/>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br/>하여야 한다.</p> <p>1. <u>제15조제3항에 따른 사회환<br/>경교육기관의 지정취소</u></p> <p>2. <u>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환<br/>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u></p> |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br>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br>① -----<br>-----<br>-----<br>-----<br><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u> -----<br>-----.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도지사</u> 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전문공사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② -----<br>-----<br>----- <u>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u> -----<br>-----<br>-----.                                                                                                                                      |
| 1.·2. (생략)                                                                                                                                                                               | 1.·2. (현행과 같음)                                                                                                                                                                                               |

③·④ (생략)

⑤ 시·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  
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다.

1. ~ 9. (생략)

⑥ (생략)

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등  
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만 환경전문  
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공감리자를 지  
정하여 공사를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8조(사후관리) ①·②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① -----

-----  
-----  
-----  
-----.  
----- 시  
·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사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                                                                                                                                                                                                                                                                                                                                                                                                                                                                                                                                   |                                                                                                                                                                                                                                                                                                                                                                                                                                      |
|-----------------------------------------------------------------------------------------------------------------------------------------------------------------------------------------------------------------------------------------------------------------------------------------------------------------------------------------------------------------------------------------------------------------------------------------------------------------------------------------------------------------------------------|--------------------------------------------------------------------------------------------------------------------------------------------------------------------------------------------------------------------------------------------------------------------------------------------------------------------------------------------------------------------------------------------------------------------------------------|
| <p>③ <u>시·도지사는</u>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br/>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br/>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br/>여금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br/>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br/>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br/>하게 할 수 있다.</p> <p>④ (생 략)</p> <p>제30조(청문 등) ① <u>환경부장관</u><br/>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br/>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br/>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br/>한다.</p> <p>1. ~ 8. (생 략)</p> <p>②·③ (생 략)</p> <p>제37조(과태료) ①·② (생 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br/>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br/>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br/>·도지사가 부과·징수하고, 제<br/>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br/>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u>따라 시</u><br/><u>·도지사가</u> 부과·징수한다.</p> | <p>③ <u>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u><br/>-----<br/>-----<br/>-----<br/>-----<br/>-----<br/>-----<br/>-----.</p> <p>④ (현행과 같음)</p> <p>제30조(청문 등) ① <u>환경부장관,</u><br/><u>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다</u><br/><u>음 각 호의</u> -----<br/>-----<br/>-----.</p> <p>1. ~ 8.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br/>같음)</p> <p>③ -----<br/>-----<br/>-----<br/>-----<br/>-----<br/>-----<u>따라 시</u><br/><u>·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u> ---<br/>-----.</p> |
|-----------------------------------------------------------------------------------------------------------------------------------------------------------------------------------------------------------------------------------------------------------------------------------------------------------------------------------------------------------------------------------------------------------------------------------------------------------------------------------------------------------------------------------|--------------------------------------------------------------------------------------------------------------------------------------------------------------------------------------------------------------------------------------------------------------------------------------------------------------------------------------------------------------------------------------------------------------------------------------|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水位低下), 수질오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u>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u>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br>-----<br>-----<br>-----<br>----- <u>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u> -----<br>-----<br>-----.                  |
| ③ 삭제                                                                                                                                                                                      |                                                                                                                   |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u>시·도지사에게</u>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제1항 단서에 따른 | ④ -----<br>-----<br>-----<br>-----<br>-----<br>-----<br>-----<br>----- <u>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u> -----<br>-----. |

|                                               |                                   |
|-----------------------------------------------|-----------------------------------|
|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br>⑤ ~ ⑦ (생략) | -----<br>-----.<br>⑤ ~ ⑦ (현행과 같음) |
|-----------------------------------------------|-----------------------------------|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br>① <u>환경부장관</u> 은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br>② (생략) | 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br>① <u>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 ---<br>-----<br>-----<br>-----<br>-----.<br>② (현행과 같음) |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① <u>시·도지사는</u>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및 국민들에 대한 자연환경보전 중요성의 인식 증진 등을 위하여 <u>시·도지사 소속하에</u> 자연환경교육·연수·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을 둘 수 있다.<br>② (생략) |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① <u>시·도지사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u> ----- <u>시·도시사와 대도시의 장 소속으로</u> ----.<br>② (현행과 같음) |